



경기도 오리농가 사육제한 중용

경기도가 오리농가에 사육제한을 중용하는 등 오리산업 보호와는 거리가 먼 정책을 펼치고 있어 오리농가들의 반발이 거세다.

경기 지역 오리농가들에 따르면 경기도가 방역회의를 열면서 사실상 오리농가들에게 사육제한을 중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타 시도는 연료비 보전이나 깔짚 등을 지원하며 오리농가들의 방역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는 반면 경기도는 무조건적인 사육제한으로 오리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한 오리농가는 “경기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를 대비하는 정책을 통해 무조건 농가들에게 사육제한을 중용하는 분위기”라며 “오리농가들이나 오리산업의 발전 보다는 행정편의주의 정책

으로 일관, 경기도 오리농가들이 정책적으로 소외되면서 오리농가가 10년 전 만 해도 100여 농가가 넘었지만 현재는 30여 농가로 70% 이상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측은 사육제한에 대한 효과가 입증됐으며 AI 보상에서도 오리농가를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청 방역 관계자는 “경기도는 오리농가들의 사육제한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낼 뿐”이라며 “보상금과 관련해서도 경기도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오리농가를 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수축산신문〉



충남도, AI 방역등급 관리제 도입

충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닭·오리 등 가금류 무차별 살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질병 관리 등급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15개 시·군은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각 시·군은 신청 농가의 방역 시설 수준, 과거 AI 발생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가지 유형(가·나·다)으로 등급을 분류한다. 상위 가나 등급 농가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때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자신의 농장을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3km 내 가금류는 모두 살처분했다. 다만, 살처분 대상 제외 농장에서 나중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적게 받게 된다. 이번에 받은 방역 등급은 오는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유효하다.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질병 관리 등급제 도입이 농가의 자율적 방역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복 특수 앞두고 오리업계 울상

복절기 특수가 다가오면서 오리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7월부터 8월 중순까지의 삼복(三伏)은 가금업계의 성수기로 1년 중 가장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오리농가들 역시 삼복을 겨냥해 사육 계획을 세우지만 올해는 지난해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처지다. 겨울철 사육제한과 맞물린 예방적 살처분이 육용오리 사육마릿수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오리협회에 따르면 육용오리 사육마릿수는 6월 1일 기준 전국 351농가에서 608만 170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7.5% 감소한 수준으로 올해 5월 도축마릿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23.9% 감소했다. 종오리 사육마릿수도 평년 대비 11.6% 감소하는 등 전체 오리 산업 규모가 축소돼 AI의 여파로부터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전남의 한 오리농가는 "사육마릿수를 늘리고 싶어도 육용오리가 없을뿐더러 늘린다 해도 몇 달 지나 찬바람 부는 겨울이 두렵다"며 "아직까지 소득안정 자금 지원에 대한 정부의 확답도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축산경제신문〉



축산단체 '산업 말살행위' 규정

“가금업계 자율 수급조절이 왜 담합행위인가”

지난 15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이하 축단협)는 성명을 발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축단협은 “원종계, 육계, 삼계, 토종닭, 오리 계열화 사업자 뿐만 아니라 관련 생산자단체들에게도 과징금부과 및 형사 고발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계열화사업자와 생산자단체의 경우 막대한 과징금으로 인해 파산에 직면해 있다. 최종적 피해는 축산농민에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국민필수재인 축산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농식품부 시책에 의한 수급조절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간주해 과징금 부과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축단협은 농식품부에 “공정위의 무차별 조사에 대해 법적 정책 대응을 다하는 것이 농식품부의 역할임에도 현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농식

품부는 향후 모든 사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 이라면서 “만약 과징금 부과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축산관련단체는 금번사태를 축산말살행위로 규정, 초강경 대응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도 국회(임시회)본회의에서 가금업계의 수급조절 행위에 대해 그 특수성을 인정해줄 것을 공정위에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육계·토종닭·오리 등 가금류는 다른 축종에 비해 생산주기가 짧아 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수급 불균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은 농산물을 공산품 기준에 맞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폭염 등 기상재해 예방·복구 현장 영농기술 지원 강화

농촌진흥청은 장마가 끝나고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농작물, 가축, 농업인 안전 등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8월 30일까지 '여름철 재해 대응 지역담당관제(156명)'를 운영한다. 지역담당관은 각각 전국 156개 시·군의 폭염과 태풍 등 여름철 주요 기상재해 발생 상황 파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활동 등을 펼치고, 피해 발생 시 빠른 복구를 위한 협력을 도모한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식량, 채소, 축산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6개 분야 85명)을 편성하여 폭염에 따른 기술지원과 영농현장의 어려움 등을 해소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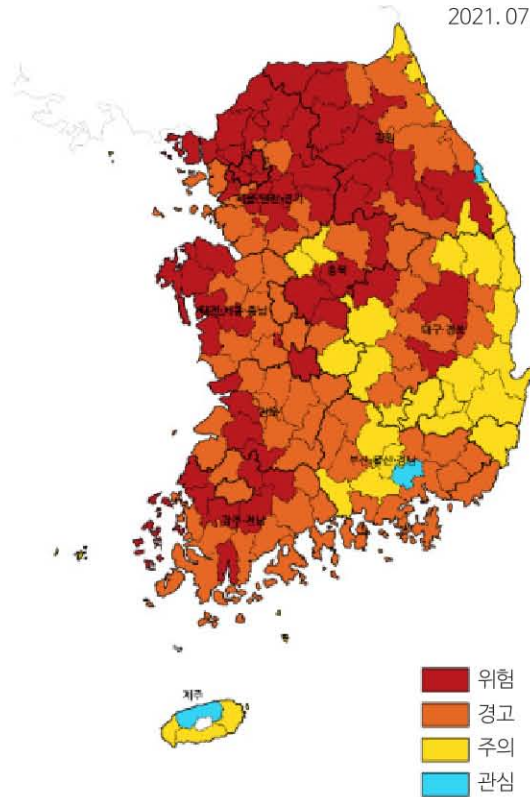
기상청은 21일부터 25일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폭염이 지속되면 가축은 고온 스트레스로 인해 사료 섭취량이 줄어들고 활동력이 떨어지며, 번식률 등이 감소하고 심하면 폐사까지 나타날 수 있다.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생적인 축사환경을 만들어주고, 선풍기나 환기팬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한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항상 먹이도록 하고 사육밀도를 줄여야 한다. 또한, 축사 지붕에 물 뿌려주기, 그늘막 설치 등을 통해 축사 내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예방한다. 단열이 부족한 닭·오리 사육장 등에는 단열재를 부착하여 내부 온도상승을 방지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김정화 과장은 "8월까지 폭

2021. 07. 21. 기준



(폭염 위험수준 분포도)

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영농기술지원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